

#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1.30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박상수】

### 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출판 산업의 발전과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경의선 책거리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됨

### 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: 경의선 책거리 운영 사무

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
·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04조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제3항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위탁의 필요성
  - 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동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 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성 확보
-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: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전부
  - 경의선 책거리 관리 및 운영
  -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
  - 경의선 책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도서 관련 기획사업
  - 시설물 및 장비 관리
  -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
- 위탁시설 개요
  - 장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-4 일대
  - 규모: 면적 6,411㎡, 연장 250m, 장폭 39m, 단폭 24m
  - 지원시설: 부스 9개 동 및 운영 사무소 등
- 위탁기간: 2022. 4. 1. ~ 2024. 12. 31.(2년 9개월)
- 수탁자 선정: 공개모집
- 소요예산: 연 5억 원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에서 설립, 시행하는 ‘경의선 책거리’ 사업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,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책을 통한 다양한 독서진흥 및 관련 문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 사업내용을 보건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요구한다 할 것이고, 이러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민간위탁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소기의 행정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.
- 그러나 동 사업의 설립 및 시행과정을 살펴보면, 경의선 책거리 조성 시기는 2016년 4월이며 이후 마포구는 동 시설의 운영을 “한국출판협동조합”에 최초 위탁하였고 2019년 현 위탁기관인 “(사)한국작가회의”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,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서는,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” 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제1항은 “구청장은 …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시행함.
- 단체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해당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법령의 입법 목적은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, 이러한 법령의 위반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추진 경위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사유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## 【관계법령】

### 〈지방자치법〉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,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